

신자유주의 시대에 빈곤은 치유불가능한가?

윤도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생겨났다. 우선 주변에 실업자, 조기퇴직자가 늘어났고, 상당수 중산층의 생활수준이 하락했다. 반면 일부 상위계층들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들의 과소비도 더불어 늘어났다. 경제는 전반적으로 불황이러는데, 실업과 빈곤은 늘어났는데, 서울 강남과 인근도시 여기저기에는 초호화 주상복합 건물이 마구 들어서고, 고급외제차의 판매량과 양주 소비량은 지금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IMF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서 빈부 간 갈등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별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금융, 자산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재산증식의 가능성이 생겨난 반면, 대다수의 월급생활자들에게 이제 안정된 직장, 고정적 수입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2등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그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는 사라졌으며, 미래에 대한 장기적 설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악화되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은 더욱 흔들리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치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자동차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 타고 보자는 심정일 것이다. 따라서 정작 지금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0년에 출간된 『IMF 이후 한국의 빈곤』(김동춘 외, 나남출판사)은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한국에서의 빈곤문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분석하면서 한국에서의 빈곤문제의 특성과 그 구체적 실태 등을 다양한 실증적 접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계층별 소득, 소비생활의 변화와 빈곤의 규모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빈곤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비공식 복지의 빈곤완화 효과와 한계, 정부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빈곤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책은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물을 편집한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이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을 한 가지로 규정짓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인식을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 우선은 한국에서의 빈곤은 정부의 고도성장정책에 밀려 그동안 주요한 정책적 과제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왔고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등한시되어 왔다는 것이다(77쪽). 둘째, 한국에서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고(141쪽), 또 빈곤층

도 870만에서 1200만 명(1999년 1/4분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빈민화가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이 책이 씌여진 시점이 2000년이어서 현재는 그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금도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의 정책수단이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소득자나 빈곤층에만 적용되는 단기적이고, 한정된 정책을 사용하기보다는 노동, 조세, 교육, 주택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143, 181쪽).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이 다른 한편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꼼꼼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통합의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143쪽)는 지적과 함께,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 명제에 입각해 최소한의 사회보장체계로 빈곤문제를 유보하고, 또다시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가" (61쪽)라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복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들은 결국 외환위기로 인한 빈곤문제를 단지 외환위기의 전후 선상에서만 나타난 특정한 사회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우리의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보다 평등하고 연대적인 사회 건설의 계기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복지 분야에서의 정책적 대안을 후반부에 자세히 다루었으나, 그것과 경제정책, 노동정책 등과의 상관성 등에 관한 논의, 신자유주의하에서의 빈곤문제의 종합적 해결방안 제시 등은 미약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의 일차적 목적을 보다 본격적인 빈곤 연구를 위한 탐색적·기초적 연구에 둔다고 본다면, 이 책은 분명히 향후 빈곤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이 감소하는 우리 학계의 추세 속에서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IMF 이후 한국의 빈곤』이 우리의 빈곤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다니엘 코엔이 쓴 『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주명천역, 2000, 시유시 출판사)은 세계화와 빈곤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탐색하고 있다. 이 책에는 여러 참신한 주장들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은 현재 서구에서 겪고 있는 빈곤의 원인은 세계화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산업혁명에 있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의 불평등은 정보기술의 혁신, 생산기술의 혁명으로 인해 각국 내에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간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서 특히 부유한 나라가 재분배에 따른 갈등문제를 가난한 나라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전 지구적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77~96쪽).

서구 빈곤의 원인을 무조건 가난한 나라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는 일단 수긍이 간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숙련 노동자가 퇴출을 당하고 숙련노동자와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단순히 자연스런 과정이 아니라, 이를 뒤에서 추동하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전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임금의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은 사회적 '인정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저자는 세계화과정에서의 금융자본의 부정적 영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75쪽), 이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나 최근 서구 복지국가의 재정적 토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쉽게 동의하기 힘든 주장이다. 물론 현 복지국가의 위기를 전적으로 세계화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많은 복지국가 연구자들은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더구나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몇십 년간 금융자산소득의 증가율이 임금소득의 증가율보다 몇 배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을 서구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의 역할을 거듭 강조한다. 즉 경제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정치라도 재분배의 방향으로 가게끔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의 불평등과 비인간화 속에서 개인들은 역설적으로 이기적 개인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162쪽)을 펴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경제학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저자는 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판도 국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히 반대한다(168쪽). 이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반대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시민운동에서 요구하는) 국제적 연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각국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저자의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저자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그런지 책 중간중간에 서구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가끔 보인다. 예를 들어 저자는 “한국이나 타이완 같은 나라의 소득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편에 속해서, 프랑스보다 평등하고 스웨덴만큼 평등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끝으로 사회정의의 필수요소라 할 교육발전에는 거의 아무런 장애요인도 없다”라고 단언한다(49쪽).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 스웨덴처럼 빈곤층의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고 또 노조조직률도 비교할 수준이 못 된다. 교육의 공공성 문제, 교육기회의 평등과 관련해서는 비교할 처지도 못 된다. 또 저자는 “오늘날 세계화에 접을 먹은 나라는 부유한 나라이지,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49쪽)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가난한 나라들이 세계화를 진정으로 반기는지는 실로 의문이다. 남미나 아프리카의 빈곤국들은 세계화를 정말 두 손을 들고 환영할까? 중국조차도 얼마 전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 나름대로 실익을 계산하면서도 - 외국 금융자본의 지배를 한편으로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저자가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만 기존의 복지국가적 시스템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다. 일례로 그는 기존의 취약계층을 지나치게 겨냥 하여 돕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151쪽). 즉 공적 부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능력자’라고 규정하는, 일종의 ‘낙인찍기식’ 복지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 그가 노동보수 문제에 국한하면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책의 하나로 제시한 것은 “소극적 세금”(153쪽)인데, 이는 내용상으로 볼 때,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의 불어 표현을 오역한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유력 보수언론들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다시 위기라느니, 한국의 노사문제가 우리 경제의 기본 체제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 발달한 네델란드 모델, 독일식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석 기사를 실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제조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획시리즈를 1면에 크게 할애하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만이 살 길이며 더 이상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요구는 무리이다. 빈곤문제의 해결보다는 경제성장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언론의 주장대로 따라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하루 평균 36명씩 자살하는데 그 중 가난과 카드 빚 등으로 인한 자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 국민소득은 1만 불이라는데, 한편에서는 단돈 2,000만 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의 아들이 몇천 억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거의 안내는 사회. 그리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 빈곤은 양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자살은 방지되는 사회를 우리는 받

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과연 빈곤과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인가? 이에 대해 앞서 소개한 두 책은 공히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 ■

윤도현 dhyoon@kkot.ac.kr | 현도사회복지대 사회학 교수,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소 사무처장, 충북참여자치연대 정책자문위원. 저서로 『계급이여 안녕?—선진자본주의사회의 계급과 복지국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방향과 과제」, 「세계화와 복지국가」 등이 있다.